

2017년 상반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

구분	순번	자문내용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1	공무원 임용 전 비위사실의 징계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자문	
	2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 재정 지원 주체에 대한 자문	
	3	학교법인 기본재산 교환 허가 관련 자문	
	4	공무원단체 사무처리 관련 자문	
	5	공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대상 관련 법률 자문	
	6	계약 당사자 관련 자문	
	7	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 자문	
	8	학교 건물 증축 공사 중 건축현장 점거 관련 자문	
	9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상계 관련 자문	
	10	하도급 근로자 등의 유치권 행사행위에 대한 자문	
	11	독서실 운영 관련 자문	
	12	학원 설립 여부 자문	
	13	유료 폰트 저작권 관련 자문	

	14	입찰 관련 낙찰자 선정 관련 자문	
	15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에 대한 자문	
	16	시설이용료 관련 자문	
	17	동일하고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문	
	18	계약 및 대가지급 처리 관련 자문	
	19	계약해지 관련 자문	
	20	개인정보 관련 자문	
	21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에 대한 계약해지 관련 자문	
	22	통학버스임차 계약시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문	
	23	행정심판 관할 관련 자문	
	24	민간위탁 방과후업체 계약해지 관련 자문	
총계			24건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	[건명: 공무원 임용 전 비위사실의 징계사유 해당여부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임용 전 비위사실이 공무원 재직 중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사실이라도 임용 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임용과 비위사실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임용 전 비위행위가 임용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징계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2	[건명: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 재정지원 주체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 교원이 소송 결과에 따라 신분이 회복되었을 경우, 소송기간동안의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사립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하는 지원주체가 누가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 「인천광역시교육청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 인건비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원해야함.
3	[건명: 학교법인 기본재산 교환 허가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이를 감독청이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하더라도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하면 교환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제한 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불허할 권한은 없으며 허가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임. <input type="checkbox"/> 학교의 발전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전제로 재산의 관리 및 유지보호를 위해 일정 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법인의 기본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하면 교환 가능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4	[건명: 공무원단체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이 사용한 사무실이 묵시적 자동 갱신된 상황에서 계약일 안에서 임차인이 사무실 퇴거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A단체에 임차인의 승인으로 A단체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으나, 임차인이 A단체에 건물의 퇴거 명령을 내렸으나 A단체가 이를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는 수단 존재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 발송하고, 임대차계약 만료가 곧 도래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해야함.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A단체에 인도인에게 인도를 주장하는 소송 제기 가능함.
5	[건명: 공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대상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육감 소유 일반재산(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 그 대상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나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 간의 협의 없이 상속인 중 특정인과 대부계약 및 변상금 징수를 하였을 경우 이 행위의 위법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대부계약의 경우 대리권 없이 대리한 행위로 그 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며, 특정인에게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무효는 아니나, 하자가 존재하는 처분임. <input type="checkbox"/>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특정인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만 유효한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 처분이라 볼 수 있음.
6	[건명: 계약 당사자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A학교 통학버스 계약시 B학교의 통학버스 운영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B학교 통학버스 운영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학버스 계약에 관한 A, B학교의 책임 및 권리 주장 여부	<input type="checkbox"/> B학교는 통학버스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고 A학교도 피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7	[건명: 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장소가 행정청의 고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중 원격강의 형태로 교사시설로 허용된 경우,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적합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구단위계획’의 세부시설조성계획에 평생교육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조정계획에 대한 변경 신청 후 평생교육시설 계획이 확정된다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정하고 있는바 세부시설조성계획상 교육기본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원격형태이기는 하나 해당 장소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므로 교육기본시설의 하나인 강의실로 그 부대시설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도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8	[건명: 학교 건물 증축 공사 중 건축현장 점거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계약 해지된 시공사 하도급업체 노무자들이 현장점검 및 가설자재 임의철거 가능여부 및 점거자들에 대한 제재 방법	<input type="checkbox"/> 철거 소송 및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보전소송으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본안소송으로 철거, 방해금지소송 가능, 형사소송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퇴거 불응죄 성립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가설자재 반출 청구 소송 및 업무방해 및 건축물침입죄 고소 가능함.
9	[건명: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선금 상계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계약시 공사타설기성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노무비 직불 등의 대가를 지불한 후 공사타설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잔액을 선금과 상계한 금액을 보증 받을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성금과 선금을 상계하였기에 대가 지불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성금과 선금을 상계하였기에 대가 지불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성금과 선금을 상계하였기에 대가 지불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성금과 선금을 상계하였기에 대가 지불 불가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0	[건명: 하도급 근로자 등의 유치권 행사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계약자가 근로자 및 자재업체에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건축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행위를 할 경우 조치 방법	<input type="checkbox"/> 법적인 유치권 행사행위가 아님. 법적 조치는 명확히 없음.
11	[건명: 독서실 운영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독서실 운영자가 독서실 운영 외에 회의실을 대여 해주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행위로가 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회의실 대여는 독서실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독서실 및 회의실 운영이 출입문을 달리하고 결재도 각각 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동일인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행위로 볼 수 없음. 단 면세사업장인 독서실과 과세사업장인 회의실을 묶어 판매한다면 부가세법위반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독서실 및 회의실 운영이 출입문을 달리하고, 결재도 각각 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동일인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행위로 볼 수 없음. 단 면세사업장인 독서실과 과세사업장인 회의실을 묶어 판매한다면 부가세법위반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12	[건명: 학원 설립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노래연습장 수평 인접 위치에 보습학원의 설립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유해업소가 먼저 설치된 경우 학원 설립 불가 <input type="checkbox"/> 유해업소가 먼저 설치된 경우 학원 설립 불가 <input type="checkbox"/> 유해업소가 먼저 설치된 경우 학원 설립 불가 <input type="checkbox"/> 유해업소가 먼저 설치된 경우 학원 설립 불가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3	[건명: 유료 폰트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A기관에서 배포한 PDF자료를 유료 폰트가 포함되어 있었고, PDF파일은 인터넷에 게시하였음. 이 경우 게시한 기관이 저작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날개의 유료폰트 구입하려 하였으나, 상대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패키지폰트 구매를 주장하며, 미구매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할 경우, 패키지폰트 미구매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저작권법상 정품으로 구매하여 제작한 PDF문서를 게시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그러나 폰트 정품 구매 계약당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이용주체가 게시하는 경우 별도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정품으로 구매하여 제작한 PDF문서를 게시하였을 경우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날개의 유료 폰트를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취소하고 패키지 폰트 구매를 강요한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 내지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임.
14	[건명: 입찰 관련 낙찰자 선정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입찰 공고시 공고문에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관련 예규명을 명시하고 이에 의한다고 할 경우, 입찰 참가업체들은 공고문의 적격심사 세부 기준 미제시로 인한 낙찰자결정을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고문에 낙찰 결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관련 예규만 명시하였어도 입찰자가 세부기준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학교의 과실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자들은 낙찰결정에 불복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관련 예규에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비록 공고문에 일부 기분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입찰참가자들은 낙찰결정에 불복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입찰 공고문에 낙찰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입찰참가자들은 낙찰결정에 불복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입찰 공고문에 낙찰방법에 대한 관련 예규명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예규 확인을 통해 낙찰결정방법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학교의 낙찰자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입찰 공고문에 경영상태 기준비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관련 예규 제6조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의 낙찰자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5	[건명: 계약이행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학교의 경우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처분소송에서 승소한 후 각 학교에 계약이행 보증금 반환요청을 한 경우 이 요청에 대한 각급 학교의 반환 의무 여부	<input type="checkbox"/>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계약을 이행 못한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반환함이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계약이행보증금 세입 조치는 적법하므로 반환 필요 없음. <input type="checkbox"/> 계약이행보증금 세입 조치는 적법하므로 반환 필요 없음. <input type="checkbox"/> 영업정지처분이 이후 위법한 것으로 판결되었지만, 계약상대자가 일부기간 동안 계약을 이행 못한 것은 사실이고,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결정 전에 계약을 이행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음.
16	[건명: 시설이용료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사전답사시 계약상대자와 해당학교 학생의 학년별 시설이용료를 구도로 합의하였으나, 이불 학년 시설 이용 후 구도로 합의한 시설이용료보다 더 비싼 시설이용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경우 대응 방법	<input type="checkbox"/> 계약서는 각종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한 쪽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움. 시설이용료 등을 판단하여 1회 이용료에 대하여 타당한 타협을 이뤄야한다고 사료됨.
17	[건명: 동일하고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동일사안으로 반복적 정보공개를 요구한 경우 종결처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반복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민원 처리시 기존 정보공개 청구건과 시교육청 이첩 민원까지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업체간 형사고발 진행시 수사기관 자료협조의 의무 존재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일 반복적 정보공개로 종결처리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앞선 정보공개를 민원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3회 반복 제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종결처리 가능 <input type="checkbox"/> 업체 간 형사고발 진행되어 수사기관에서 자료 협조할 의무 있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8	[건명: 계약 및 대금지급 처리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교 급식업체 계약 및 이행을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바,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통한 계약상대자의 정산 없이 임의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통해 계약을 포함한 업무를 진행 중이므로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통한 계약상대자의 정산이 대금지급에 필요한 구비서류이므로 정산없이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19	[건명: 계약해지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에 따라 통학버스 임차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과업지시서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임차계약해지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20	[건명: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생들의 진술서 사본을 학부모 대표에게 전달하고, 학부모가 대표가 임의로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학생들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 학부모들 공개하였다면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학생들의 진술서 내용에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진술서를 전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지 않음.
21	[건명: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계약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계약미이행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소명이 없고 납품지연 설명서만 제출한 경우 이 설명서가 계약미이행 또는 계약이행 지연의 객관적 증빙자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납품지연 설명서만으로는 계약불이행의 객관적 증빙자료라 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계약을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가능하며, 납품지연 설명서는 수입에 차질이 있다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이므로 수입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납품지연을 정당화할 수 없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2	[건명: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통학버스 임차계약시 계약특수조건에 차량연식제한, 지역주민이 운전원 및 안전요원으로 배치, 운전원의 나이 제한 등의 특수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질서를 반하지 않는 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23	[건명: 행정심판 관할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사안으로 A학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내렸으나, 이 학교폭력사안의 피해학생이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재심 신청하였고, 지역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가중하는 결정을 함. 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 결정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A학교의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함. 이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각기 다른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를 각각 하였으나, 심판대상이 각각 다른 처분 또는 결정이므로 각각 심판 청구는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각각 심판 청구 가능함. 또한 심판 청구대상이 상이함으로 각각 청구 가능함. 단 상급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상급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재심위원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청을 구속하므로, 결정에 의해 변경된 처분의 효과는 소급해서 발생하게 됨. 따라서 위원회 결정에 의해 처분이 변경된 뒤였고, 청구인이 변경 전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대상 처분이 부존에 대하여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4	[건명: 민간위탁 방과후업체 계약해지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방과후업체와 학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방과후업체 강사의 법령 위반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방과후업체와 학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교 입장에서 계약 당시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법 위반 등) 계약 후 들어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함.